

박대통령, 정기국회 앞두고 野회담 제의 응할까

민생입법 등 민주당 협조 절실... 회담제제 조정 관건

국정원 국조 마무리... 새누리 기류 변화 가능성 주목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완료 시점인 23일을 직전에 두고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양자회담' 또는 여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담'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야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안에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3자 회담, 청와대의 5자회담, 다시 김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로 회담의 형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회담 개최 시기를 놓쳤다.

여기에 21일 청문회로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여야의 '감 대 감' 대치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회담 개최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에 이런 기류가 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압박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화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들어오도록 야당에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마련, 당 지도부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을 수용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자는 내용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대선공약 실천 등을 위해 여러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니 그때 가서 (여야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하는 단계적



“청와대에 항의 서한 전달하러 갑니다”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를 비롯한 야당위원들이 21일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식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필뉴스

접근법이 좋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대치 정국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아직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카드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 직전인 다음주 초중반에는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정상 개최를 비롯한 정국 안정의 키는 결국 청와대가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세계개편안 처리 등을 처리하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려면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 개최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도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정치권을 향해 정부가 제출한 4·1 부동산대책 핵심법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굳이 자신이 포함되는 '5자 회담'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뜻을 이미 청와

대에 전달했다고 '공개'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건은 회담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등을 회담 의제로 고집한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원 개혁의 논의주체를 국회에서 갖는 대안이 나온다면 여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1일 당당 소속 조명철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광주일보 20·21일자 3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대통합이야말로 국민의 지상 명령이었고 최고 가치 중 하나였다"며 "우발적 발언이었다고 해도 여야 의원 간 통합을 해칠 수 있는 지역적 민감 발언이 있었던데 대해 당 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치인의 언행은 남김없이 새겨진다고 생각하며, 조선시대 사관에 의해 작성된 사초와 같다"면서 "당 대표인 저부터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저도 부족한 점을 돌아볼 테니 모두 다시 한 번 자성의 시간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유감 표명은 조 의원의 발언 때문이 더 이상 확산할 경우 정기국회로 앞둔 정국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우여 “‘광주경찰’ 발언 유감”

민주 “대리 사과 부적절”... 조명철 윤리위 제소키로

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우발적 표현'이라며 매우 약한 유감 표명을 했다"며 "대리 사과"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다 확실하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위원의 13만 경찰에 대한 진실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 태도도 보였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새누리당 사과와 해당 위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22일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광주 경찰" 발언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국정조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13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침묵' 박대통령 비판·특검 촉구

野 단독 국정원 국조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원·판 고발'

야당은 21일 단독으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미합의 증인과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증인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불참함에 따라 반쪽청문회로 전락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

권이 스스로 이 부분을 털고 가야 정권의 정통성 확보되고 더 이상 국민의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입장 밝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특검을 통해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을 해서 부정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번

국조는 방탄국조였다. 새누리당은 증인선서에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오히려 증인선서를 방해하고 증인에게 왜곡된 말을 할 것을 앞장서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증인선서서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야당 측 의원 이틀으로 증인선서서 거부와 불출석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기자간담

회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과 대통령 사과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박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면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공작, 은폐조작과 관련해서 동조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산국회, 정기국회 등원과 관련, "원내의 병행투쟁의 연장선 상에서 접근해 갈 것"이라면서 "주국야광(晝國野廣) 즉 주간엔 국회서 야간엔 광장에서, 또 환경이 그것도 지켜지지 어렵다면 '주중 국회 주말 광장', 즉 '중국말광(中國未廣)의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예결위 첫 전체회의 2012년도 결산심사 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현 의원)는 2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산심사는 내주에야 본격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결산심사 소위에서 활동할 위원들의 각 당 배분 규모 등은 이날 선출된 간사와 이 위원장이 협의 후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정가

시의회, 문화수도 특별법 철회 대책기구 구성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법위원회(위원장 임동호)는 광주문화도시시협의회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안(이하 조성사업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시의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22일 시의회에서 열고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6월 11일 전격적으로 입법 예고한 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 및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시의회 임동호 문화수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 민예총,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 예총 등 시민사회 및 문화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진보 광주 기초의원들 '일정공개' 해외연수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의원 9명은 일정을 공개하고 해외 연수를 떠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21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라며 "견문을 넓히고 의정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합심해 연수를 기획하고 공부했다"고 밝혔다. 국감연 의원단 대표는 "이번 연수는 최근 대안경제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는 협동조합의 선진 사례를 직접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우수한 교통문화와 도심 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들은 ▲지역·농·특산물 생산 판매 활성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도심 재생형 마을 만들기 ▲실업자·고령자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시민주도형 생활협동조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